

07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 관계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례연구

▣ 서보혁 ▣

Contents

1.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분쟁 후 상황에서 인간안보
3.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원인과 경과
4. 인간안보 위협과 대응 전략
5. 평가와 결론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설명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류 시각이 무시해온 점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다시 쓰고 있다.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분쟁 후 남북 관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한 정부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의지해 상호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는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 내에서는 두 사건을 계기로 피해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간안보는 물론 일반 대중의 개인, 정치 안보도 악화되었다. 본 연구사례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둘이 항상 대립하는지는 보다 많은 사례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인간안보, 국가안보, 남북 관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북방한계선

1. 연구목적

분단과 전쟁 60주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남북은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다. 또다시 상대를 적대시하는 언동이 횡행하고 두 분단 정권은 대중에게 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건을 경과하면서 남북 간 적대적 상호의 존관계가 재연하는 듯이 보인다.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도 남북 관계는 국가 고유의 정책결정영역으로 성역시되어 왔다. 그와 다른 의견은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억압의 제일 대상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그런 위험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남북 간, 더 정확히 말해 남북의 두 국가권력이 야기한 정치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 국가권력은 대중에게 총화단결과 희생을 강요해왔다. 남북 관계에서 주(主)는 정권이었고, 객(客)은 일반 대중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국가안보였다.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남북 관계의 역사적 본질과 변화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자문해본다.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설명방식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다.

‘위로부터의 접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논의방식은 남북 관계의 속성, 실태, 변화 전망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론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의해 남북 관계론에서 소외된 시각, 행위자, 관심사, 행동양식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렇지만 급진론이나 계급론은 그 편향성과 진부함 때문에 새로운 접근의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대척점에서 있으면서도, 선형적으로 그것과 대립하거나 그것을 대체하지 않는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시도로, 여기서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남북 관계를 분석·평가하여 남북 관계를 새롭게 볼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안보 분석틀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권력정치 혹은 국가안보 등 기존의 주류 시각이 배제 혹은 무시해온 점들을 부각시켜 남북 관계 다시쓰기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사례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전후로 한 남북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분쟁 후 남북 관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간안보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본 논의주제에 알맞은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3절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여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필연성과 남북 관계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이 될 4절에서는 두 사건의 영향과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대응을 인간안보 위협과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5절에서는 두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인간안보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 관계에 현상적 변화가 일어난 2008년부터 2011

년 말 김정일의 사망(12. 17) 이전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다. 국내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국제기구의 관련 문서와 언론보도, 그리고 연평도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¹⁾

2.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분쟁 후 상황에서 인간안보

인간안보 개념은 냉전 붕괴와 세계화, 안보 위협 요인의 다변화 및 초국경화, 국가 권위의 약화, 비정부기구의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나타났다.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안보 개념 및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기존의 국가안보론은 ① 내전과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② 국가안보의 대가로 개인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③ 주권개념의 변화 및 초국적 위협의 등장,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도덕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과 부합되지 않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반면에 인간안보는 세계인권선언, 유엔헌장 및 제네바협정 등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모든 안보는 궁극적으로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나타난 것이다.

2000년 유엔사무총장이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호소에 부응하여 2001년 유엔 인간안보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인간

1) 본 연구주제에 대한 학술논문을 (주)한국학술정보(KISS)에서 “천안함”, “연평도”를 제목으로 검색해본 결과 확인된 50여 편은 글은 모두 전통적인 국가안보 시각에서 남북 관계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안보정책을 다루고 있으나,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두 사건을 다루거나 그와 관련된 남북 관계를 분석한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http://kiss.kstudy.com> (검색일: 2011년 12월 5일).

안보를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전인적 삶의 결정적 핵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구체적으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분야별 혹은 전반적인 전략 수립과 역량강화를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안보는 대중중심적, 다영역, 포괄적, 맥락적, 예방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²⁾ 같은 맥락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의 특징으로 관련 요소들 사이의 비중이 비슷하고 서로를 강화하는 소위 ‘상호 취약성’이 꼽힌다. 인간안보 증진 전략이 유연하고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인간안보의 두 핵심 영역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동시에 추진할 성질의 과제이다.³⁾

그렇지만 안보 개념에 어떤 종류의 위협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나타났다. ① 위협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안보개념이 너무 넓어져 개념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②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③ 국제정치는 여전히 무정부상태로서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 ④ 모든 문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는 결국 권력기구의 남용을 초래한다 등이 대표적이다.⁴⁾ 인간안보의 위상을 둘러싼 논의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관계 및 인간안보 증진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인간안보론이 부상하면서 개념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것이 국가안보와 어떤 관계냐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인간안보 위협 요인이 국가만은 아니지만 내전, 실패국가, 비민주국가, 저발전국가 등

국가에 의해 시민들이 억압과 빈곤을 겪게 되자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거나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⁵⁾ 다만, 그 보완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아가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국가의 위상은 무엇인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 방향은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비국가 행위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일 것이다. 인간안보가 국가중심적 시각과 군사 문제에 대한 주된 관심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비국가 행위자와 비군사영역을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인 평화와 안정은 누가 제공하느냐, 그리고 인간안보의 주요 관심사를 비국가 행위자 중심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인간안보가 안보 문제를 개인으로 환원시켜 인간안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⁶⁾ 본 논의는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유럽에 비해 아시아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 외에도 국가주권의 약화 가능성, 국제사회의 간섭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많은 국가들이 인간안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국가안보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

2)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Now: Final Report* (New York: CHS, 2003), p. 3.
 3) S. Tadjbakhsh and A. M. Chenoy, *Human Security: Concepts and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2007), p. 16.
 4) Tadjbakhsh and Chenoy(2007), p. 72-93.

5) P. H. Liotta, “Boomerang Effect: The Convergence of National and Human Security,” *Security Dialogue*, Vol. 33 No. 4 (2004), pp. 473-488.
 6) 전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2004), p. 39; 김명섭, 「국가안보, 인간안보, 민족안보: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위한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모색」, 『정책연구』, 제137호(2001), p. 30.

고 있다는 점이다.⁷⁾ 이런 경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대립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경험, 양 측면에서 둘의 관계는 개방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인간안보 증진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할 때 우선 고려할 점이 국가의 이중성이다. 인간안보의 핵심 영역이기도 한 인권 증진에서도 야누스와 같은 국가의 속성은 지적되어 왔다.⁸⁾ 국가는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대중과 계약 맺고 폭력을 독점하고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ion: R2P)’을 온전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국가가 대량학살, 인종청소, 억압 등의 형태로 대중을 위협하기에 이른다.⁹⁾ 따라서 국가가 인간안보 증진에 나설 수 있는 필수조건이 민주화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인간안보 제공 의지를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은 국가가 인간안보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과제이다. 소위 ‘강한 국가(strong state)’이다. 강한 국가는 공공이익을 창출·분배할 자원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재난이나 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국가는 재건 과정이 공평하고 효과적이고, 대중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촉진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일을 중요시해야 한다.¹⁰⁾

7) Akiko Fukushima, "East vs. West? Debate and Convergence on Human Security," in Sorpong Peou (eds.), *Human Security in East Asia: Challenges for Collaborative Action* (New York: Routledge, 2009), pp. 53-54.

8) 서보혁, 『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서울: 책세상, 2011), pp. 22-25.

9) A. Mark, "A Signifier or Shares Values," in P. Burgess and T. Owen (eds.), "What is Human Security?" Comments by 21 Authors, Special Issue of *Security Dialogue*, 35 (September 2004), pp. 366-367.

10) Tadjbakhsh and A. M. Chenoy(2007), pp. 176-178.

인간안보 논의는 그 정향을 생각할 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우를 포함해 모든 사례에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이 논의가 부상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자연재해와 함께 다양한 요인에 의한 분쟁 상황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분쟁 사례에서 위협, 전략, 능력 등 인간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이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분쟁 후 인간안보에 관한 분석이 다양한 사례연구와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2009년 유엔 인도주의 사무처 인간안보팀에 의해 제시되었다. 여기서도 이 보고서를 원용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있어 아래에서는 해당 부분을 간략히 소개한다.¹¹⁾

분쟁 이후 상황에서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논의는 분석-이행-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계에서의 논의 공백을 가져와 사례 연구를 할 것이다. 분쟁 이후 상황에서 인간안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요 부분은 ① 필요/취약점/능력 분석, ② 인간안보 전략, ③ 자원 동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목표는 넓은 공백에서 안보와 존엄을 개인과 공동체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의 실제 필요/취약점들과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분쟁 이후 상황에서 모든 인간안보 프로그램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인간안보 분석의 시작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체적인 위협 상황에 대한 파악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 필요/취약점 그리고 그런 위협에 대응 가능한 능력이 포함된다.

11) Human Security Unit,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 Security in Theory And Practice: Application of the Human Security Concept and the 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United Nations: New York, 2009).

〈표 1〉 분쟁 이후 인간안보 위협, 필요, 능력 (예시)

분쟁 이후 위협	필요/취약점			능력
	지방	국가	지역	
식량안보 - 전쟁의 결과 식량 체계의 붕괴 - 기아 - 기근 - 식량 공급과 분배의 혼란 - 영양실조	- 기본 식량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 부족	- 식량 생산과 공평한 분배를 보장할 국가능력의 부재 - 외부 충격을 흡수할 국가 경제 능력의 부재 - 파괴된 식량 생산과 분배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자산 부재	- 농산품의 지역 거래와 음식 관련 생산품의 의존 - 식량 관련 위기에 대응하는 충분한 지역적 통합의 부재	- 식량 재정과 분배 체계 - 다양화된 농업과 경제

둘째, 인간안보 위협 분석을 토대로 〈표 2〉와 같이 인간안보 증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달성할 자원의 획득 및 투입 과정을 분석한다.

〈표 2〉 분쟁 이후 인간안보 증진 전략과 능력 (예시)

인간안보 요소	전략	필요한 능력
식량안보	- 영양에 대한 접근을 보장 -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국민 능력 강화 - 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 공평한 식량과 농업 보조 - 기근 조기경보 체제 - 농촌공동체와 지역 생산 과정과 분쟁 체제의 재생	- 다양화된 농업과 경제 - 지역과 국가 분배 체제

셋째, 그렇지만, 분쟁 이후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전략상 공백(gaps in post-conflict strategies)이 나타난다. 거기에는 안보 공백, 정부 공백, 국제 대응상의 공백, 자원 공백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본문에서는 위협 분석, 전략 및 자원 분석 후 전략상 공백을 분석하여 평가와 연결지를 것이다. 각각의 공백이 무엇인지는 본문에서

예시한 후 사례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 활동, 일관성, 상호관계 등을 분석한다. 본문에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 특히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3.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원인과 경과

1) 사건의 원인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멀리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상태에서 남북간 군사적 대치,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의 휘발성,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된 남북 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두 사건은 분단 체제가 위험하고 남북 모든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주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쌍방 간 적대행위 및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종전 이후에도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어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에서는 대응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1953년 8월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서해상에 임의의 북방한계선을 그어 한국군의 북진을 규제하려 했다는 것이 통념이다.¹²⁾ 그 이후 NLL을 경계로 하여 남

12) 그러나 미 중앙정보부(CIA)의 비밀문서는 북방 한계선이 1965년 1월 14일 유엔사령부 해군구

북한의 해상이 유지·관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군은 NLL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규정하고 NLL 이남은 한국의 관할수역으로 변함없이 확고하게 수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³⁾ 실제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11조)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NLL을 남북 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북한은 NLL을 유엔사 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유령선”인 만큼 정전협정은 물론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NLL 인근의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개 도서는 유엔사 측 관할이지만 도서 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1999년 연평해전 이전까지 주로 6~8월의 꽃게잡이 성어기에 연평균 22회 NLL을 침범하였다.¹⁴⁾ 북의 NLL 무력화 공세는 서해상에서 물리적 충돌,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설정(1999. 9. 2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그리고 남북 대화에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설정 문제 협의의 주장(2006.3~2007.7 제3~6차 장성급 군사회담, 2007.11 제2차 국방장관급 회담) 등에서 강온 양면전술을 나타냈다. 그 사이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였다. 그런 합의가 어떻게 휴지조각이 되고 협력해가던 남북이

성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설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Confidential BGI RP 74-9, January 1974,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http://www.kpajournal.com/declassified-documents-old/> (검색일: 2011년 11월 30일).

13) “북방한계선(NLL) 관련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 자료, 국방정보공개/국회관련정보공개/국회관심 주요국방현안/국방정책/27번, www.mnd.go.kr (검색일: 2011년 11월 22일).

14) 한반도 평화포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실행방안 연구: 서해 평화번영과 인천 이니셔티브』, 인천시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2011년 9월 30일, p. 44.

다시 대립하게 되었는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발생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따른 남북 관계 악화를 근인(近因)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기근과 억압 등 대내적 부정의(unjustice)가 대외적 긴장을 가져오는 북한의 현실이 근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⁵⁾ 그럼에도 그것을 촉발하고 남북 관계를 경색→대립→충돌로 악화시킨 근인을 제외하고 문제를 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¹⁶⁾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북한의 정상국가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같이) 북한의 선(先)핵포기, 기존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는 6자회담의 동시행동원칙과 남북 간 신뢰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 북한의 비협조가 충분히 예상됐다.¹⁷⁾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이명박 정부를 “보수집권세력”, “친미사대매국정권이자 반복 반통일정권”으로 규정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을 “주제넘은 소리”라고 하며 6·15, 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장하였다.¹⁸⁾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이상희 주도의 강경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북 정책 기조와 북의 강경 태도를 계기로 부상하였다. 2009년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성명과 1월 30일 조평통의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무효화

15) Brendan M. Howe, “From Human Insecurity to International Crisi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1 No. 2 (2011), pp. 184-188.

16) 통일부 홈페이지 알람마당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코너 참조.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1년 11월 25일).

17) 이하 내용은 서보혁, 「연계와 단절의 딜레마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 조기 처방의 필요성과 대안」,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14호, 2008년 3월 31일.

18) 『연합뉴스』, 2008년 4월 20일; 『조선일보』, 2008년 3월 7일.

한다”는 선언 이후, 2월 13일 이상희 장관은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군에 대해 지해공(地海空) 전력을 동원한 초동 제압작전을 보고하였다. 국방부가 언론에 북한의 NLL 도발시 F-15K 전투기 투입을 비롯한 선제타격 계획을 밝히자, 북한에서도 해주 일대에서의 전투기 출격 증대 및 화력 증강에 나섰다. 그 이전 10년 동안 유지되어온 국지적 충돌의 전면전 확산 차단 장치가 모호해지고 ‘전쟁 억제’라는 국가위기 관리의 기축이 ‘전쟁 승리’라는 야전군 정서로 급격히 경도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 10일, NLL을 비스듬히 2.2km 넘어온 북한 함정에 대해 경고사격 후 즉시 격파사격이라는 변화된 교전규칙을 적용하여 약 3분 이내 4,960발의 과도한 총포탄을 퍼부어 “대청해전”을 승리하였다.¹⁹⁾ 이를 통해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한 자신감(혹은 자만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패전한 북한군은 보복을 다짐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그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대청해전 패배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 2월 인민군 총참모장 김격식 대장을 4군단장으로 전격 임명하였다. 김격식의 부임은 해주와 서해 5도 일대에서의 전략적 비중 증대 및 그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예고한 것이었다. 드디어 북한은 2010년 1월 26일 NLL을 부정하며 임의의 5곳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다음 날 백령도 인근 NLL 북방에 해안포 사격을 감행하였다.²⁰⁾ 이와 같은 남북 관계 악화와 양측의 군사모험주의가 만나면서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였다.

19) 김종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그 정치·군사적 함의」, 서보혁 외, 『천안함 외교의 침몰』(서울: 풀빛, 2011), pp. 40-49.

20) 김종대(2011), pp. 49-52.

2) 사건 경과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침몰 직후 군(軍)은 인명구조 및 선체인양 작전을 벌인 이후 2개월여 동안 침몰사건을 조사하였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고,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고 결론내렸다.²¹⁾ 5·20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5월 24일 대통령과 관련 3개 부처(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국민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²²⁾ 그리고 대북 결의를 목표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도록 미국 등과 협력해나갔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물론 한중 관계마저 냉각되어 갔다. 북한은 중국과 밀착했고, 한미동맹은 강화되는 듯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8월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 해안포를 약 130발 발사해 이중 10여 발이 NLL을 넘었다. 이 무렵 남한군은 백령도에서 해상침투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화력을 동원한 훈련을 대폭 증강했다. 결국 남북 간 팽팽한 긴장은 연평도에서 폭발하였다.

11월 23일 백령도의 남한 해병부대는 10시 15분부터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해안 쪽으로 설정된 사격구역에 K9 자주포, 건인포, 벌건포 등 복합화기로 이루어진 총 3,960발의 사격이 4시간여 이어지자 드디어 오후 2시 34~46분

21)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2010년 5월 20일.

22) 이명박 대통령의 5·24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복풍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24일.

사이 북한의 개머리 진지에서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이날 북한의 포격은 해안 동굴 진지의 해안포뿐만 아니라 후방의 장사정포까지 동원된 매우 입체적이고 준비된 사격이었다. 이에 13분 만에 연평도 해병은 개머리가 아닌 무도 쪽으로 응사를 했다. 북한의 포탄이 발사된 원점을 잘못 파악한 탓이었다. 그러나 오후 3시 11분 이번에는 북측 개머리와 무도 양쪽에서 포탄이 날아왔고 남측은 14분 만에 양쪽으로 응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2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다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²³⁾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11.29)에 이어 “세계 최강의 치명적 공격무기 배치”, “금문도와 같은 서북 도서 요새화” 등과 같은 발표를 쏟아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결과로 나타난 물리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의 연장선에서 있다. 남북 정권 간 군사모험주의 대결 속에서 남북한 주민의 안전과 복리는 관심 밖에 있었다.

4. 인간안보 위협과 대응 전략

1) 총체적 인간안보 위협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섬 주민들의 인간안보는 물론 생명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포격 이후 인간안보 중에서는 경제안보 위협이 두드러졌는데, 꽃게철이 한창인데도 조업중단 조치가 내려져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23) 「Q&A로 본 연평도 포격도발」, 『국방뉴스』, 2010년 12월 7일; 김종대, 2011, p. 58.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꽃게잡이용 어구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²⁴⁾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축소, 요식업 및 관광산업 타격, 조업 축소 등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²⁵⁾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한이 다같이 위협받은 대표적인 영역도 경제안보이다. 남한 정부의 5·24조치 이후 1년간 북한은 남한과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수입, 선박 운항료의 감소에 따라 약 2.7억 달러 상당의 외화수입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시에 남한의 대북 협력기업들도 5·24조치 직전에 진행되던 교역사업과 관련한 반출입 허가 유예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상환 유예 등을 호소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²⁶⁾ 5·24조치 이전에는 2009년 남북 교역 실적 기준으로 약 800여 개 업체가 파악되었으나, 5·24 조치 이후 정부가 파악한 대북 교역업체는 2011년 5월 기준으로 약 500여 개로 파악되었다.²⁷⁾ 또 5·24조치로 인한 남북 간 선박·항공기 운항제한에 따른 손실도 남북한에 함께 발생하였다.²⁸⁾

건강안보 위협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구조활동에 나선 사람들이다. 제대를 하지 않은 병사들에 대한 치료와 보직관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전역을 한 6명을 제외한 52명은 실무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다시 합정근무를 하고 있는 장병도 5명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 9월 20일 의가사 제대한 천안함 장병 A씨는 국군수도

24) 『경향신문』, 2010년 11월 30일.

25)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3일; 『경향신문』, 2010년 6월 1일; 『경향신문』, 2010년 11월 25일.

26) 통일부, “2011년도 국정감사 송민순 위원 요구자료,” 제303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년 9월.

27) 통일부, “2011년도 국정감사 원혜영 위원 요구자료,” 제303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년 9월.

28) 구체적 내용은 통일부, “2011년도 국정감사 김선동 위원 요구자료,” 제303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년 9월 참조.

병원의 치료가 허술하다며 민간의료기관으로 옮기겠다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군당국은 이를 묵살했다.²⁹⁾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전역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면증, 우울증을 겪으며 그 중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람도 있었다.³⁰⁾ 천안함 구조대원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한주호 준위의 순직이 있었던 3월 30일에는 150명이 넘는 구조대원들이 단 한 대의 감압장치에 의지한 채 수중의 각종 위험과 싸워왔던 것으로 밝혀졌다.³¹⁾ 연평도 포격으로 1,700여 명의 주민 모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이 더 걱정스러웠다. 연평도의 일부 아이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³²⁾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는 국가폭력으로부터 개인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안보와 밀접한 정치안보도 경제안보만큼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크게 위협받은 인간안보 영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지적이 국내외 인권기구들로부터 제기되었다.³³⁾ 대통령, 여당, 검찰, 경찰이 앞장서 국가정체성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시민권을 억압하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2010년 5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체성’ 수호를 명분

29) 『뉴시스』, 2010년 10월 4일.

30) 『동아일보』, 2010년 12월 17일.

31) 감압장치는 감압병과 동맥혈 기체 색전증 등 고압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구이다. 『오마이뉴스』, 2010년 4월 3일.

32) 『경향신문』, 2010년 11월 29일.

33) Frank La Ru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17/27/Add.2, 21 March 2011. 국내 인권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rangbang.or.kr/kr/new>.

으로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³⁴⁾ 검찰도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미네르바’ 사건에 이어 2010년에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발표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시민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했다.³⁵⁾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 자신의 견해를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45명 역시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받았다.³⁶⁾ 이런 일련의 정치안보 위협은 국제사회에도 알려져 천안함 사태 1주년이 가까워진 2011년 3월 11일,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하였다.³⁷⁾

한편,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북한의 공동체안보와 식량안보는 더욱 큰 위협에 직면하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 준전시상태가 계속돼 내부 통제가 더 심해지면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또 장마당 쌀값도 연평도 사건 이전보다 크게 올라 1kg에 1,500~1,800원을 웃돌아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 심해졌다.³⁸⁾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대북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즉 남북 주민의 인간안보 달성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 1년이 지나서도 청와대 불바다 위협, 남한의 연평훈련에 대한 비난, 김정일 위원장의 서해 군부대 시찰, 적개심 선동과 같은 일련의 갈등유발 방식으로 내부 동원 체제와 남북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북한 사회 내

34) 김종목,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주간경향』, 제907호, 2011년 1월 4일.

3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성명: 검찰은 교묘한 말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2011년 11월 8일.

36) 참여연대,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2011년 9월 21일.

37) 이 단체는 한국을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으로 선정하였다. 정용인, 「3년째 인터넷 감시국 '창피한 코리아」, 『주간경향』, 918호, 2011년 3월 29일.

38) 『연합뉴스』, 2010년 12월 23일; 『뉴시스』, 2010년 12월 22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 인간안보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 인간안보 전략의 부족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여건에서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자원을 투입하는 노력을 펼쳤다. 연평도 포격 이후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발전 방안을 검토해나갔다.³⁹⁾ 특히 경제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서해5도 지원사업’을 약속한 후,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10년도에 309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 5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221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⁴⁰⁾ 그러나 ‘서해5도 지원사업’은 예산 문제에 부딪혔다. 2012년도 서해5도 지원사업 예산이 최고 82.5%까지 깎이자 연평도 주민들과 인천시가 반발하였다. 한편, 인천시는 중앙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닥터헬기의 운항범위 확대, 신형 소방헬기 도입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⁴¹⁾ 그렇지만 연평도 주민들의 관심사는 남아 있었다. 연평도를 방문해 살펴본 결과 주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근절과 근해 낚시 활성화를 위한 통발어선 특별감척을 희망하고 있었다.⁴²⁾

39) 행정안전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해 5도 발전 추진 전략은 ①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②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③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④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⑤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 ⑥ 지역 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등으로 제시되었다. 교통연구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행정안전부 용역연구 보고서, 2011. 7.

4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연평도 北 포격도발 1년, 서해5도 주민들 안정을 되찾아」, 2011년 11월 22일.

41) 『한겨레』, 2011년 11월 22일.

42) 한반도 평화포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 관련 연평도 현장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연

2011년 9월 말 현재 연평도는 피난 갔던 주민들이 모두 되돌아왔고 추가배치된 군인과 복구인력으로 거주민은 1,913명으로 연평도 사태 당시 1,762명보다 151명(8%) 늘었다.⁴³⁾ 그러나 연평도가 안전해졌다고 판단해서 돌아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먹고살 길이 없어서” 돌아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⁴⁴⁾ 개인 및 공동체 안보는 남북 간 대립으로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다.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공장을 가동해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 남북 경협 기업들은 5·24 조치로 파산에 직면했다.⁴⁵⁾ 북한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경협지구로 선정된 압록강 유역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계획도 남한쪽에 먼저 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한 기업들도 북측의 제의에 관심을 보였고 투자 논의를 진전시켰으나 정부에서 대북 신규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봉쇄 전략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⁴⁶⁾ 천안함·연평도 충격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에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안보 증진 전략에 역행하는 사례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개인안보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가령, 언론의 왜곡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해 해당 개인이 법을 통해 시정한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가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승헌 교수의 주장을 왜곡 보도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

평면사무소 회의실, 2011년 8월 4일.

43) 『경향신문』, 2011년 10월 5일.

44) 송지혜, 「새집 줄 테니 평화를 다오」, 『시사IN』, 제219호, 2011년 11월 26일, p. 15.

45) 김영일, 「대북 교역업체의 분노와 눈물」, 『경향신문』, 2011년 11월 9일.

46) 『프레시안』, 2011년 2월 26일.

데,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조선일보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⁴⁷⁾ 공동체안보를 위한 해당 주민들의 노력도 나타났다. 김포, 인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파주, 임진각, 철원 등지의 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준)’를 구성해 탈북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살포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⁴⁸⁾ 여기에 남북 대립을 해소하여 남북한 주민 전체의 안전을 추구하는 노력도 있었다.⁴⁹⁾ 말하자면 민간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병행, 적어도 인간안보 중시 입장에서 서서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안보에서는 개선보다는 악화될 우려마저 보였다. 연평도 포격 이후 여당인 한나라당은 “햇볕정책”, “친북중북주의자들” 탓을 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일방으로 강요하는 태도를 보였다.⁵⁰⁾ 연평도 포격 다음 달인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폭 강화된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된 안보영상물은 군사독재 시절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군사훈련, 안

47) 『미디어뉴스』, 2011년 9월 16일.

48) 『통일뉴스』, 2011년 4월 13일.

49) 2011년 5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밀가루 172톤을 지원하고, 같은 해 9월 사상 처음으로 남한의 7대 종단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해 백두산 평화기도회를 가진 것이 그 예이다. 『경향신문』, 2011년 9월 26일.

50) 예를 들어 연평도 사건이 며칠 지난 11월 29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도발이 우리의 호국훈련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거나,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하루 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담회에서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는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정신 나간 친북중북주의자들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2011년 11월 28일.

보교육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⁵¹⁾ 특히 군의 민간인 사찰 및 ‘불온 도서’ 선정은 안보불안을 활용해 군의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정부의 국가안보 중심 접근과 그로 인한 인간안보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민간 진영에서 한반도 차원의 인간안보 증진 전략이 제시되어 왔다. 가령, NLL 문제에 천착해온 정태욱 교수는 두 사건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 NLL문제 해결과 서해상 평화정착 방안으로 ① 서해의 NLL을 동해의 NLL과 동시 폐기, 남북 간 해수의 평화적 이용의 경계 설정, ② 서해와 동해 접경수역에 공동어로구역 설정, ③ 서해 및 동해 NLL에서 남북 민간 선박의 통행 자유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⁵²⁾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지회(GPPAC-NEA)는 천안함 사태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황을 우려하여 6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시된 방안은 ① 남북은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②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에 나서고, ③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 조사가 필요하고, ④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립과 비무장지대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시하고, ⑥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 등이다. GPPAC-NEA는 또 천안함 사태가 전쟁과 분단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동북아 및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6·15 공동선언, 10·4선언, 9·19 공동성명의 이행도 촉구하였다.⁵³⁾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서해상 군비경쟁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인간안보 패

51) 참연연대, 「논평: 군사독재시절 연상시키는 강압적인 안보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반돼」,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29일.

52) 『오마이뉴스』, 2011년 11월 23일.

53)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 December, 2010.

러다임을 압도하였다. 천안함·연평도 충격으로, 나아가 분단 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 어느 누구도 인간안보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두 안보 패러다임의 공존 혹은 보완이 타당한 상호관계의 형식일 것이다.

두 안보 패러다임의 공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먼저 국가안보 견지에서 남북은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실제 2011년 2월 9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이같은 의제가 논의되었지만 결렬되었다.

둘째, 인간안보 견지에서는 남북이 주어진 자원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 남북한이 처한 인간안보 상황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건강 및 식량안보의 긴급성을 고려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는 다시 남북간 신뢰 형성에 이바지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선순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한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비정부부문의 참여, 정부와 비정부부문의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안보위기를 활용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커뮤니케이션과 권위주의적 통치 가능성⁵⁴⁾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전략 수립 및 자원 투입 과정에서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대응은 경제안보에 부분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 인간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게 부족한 인간안보 전략은 정부가 인간안보 패러다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 스스로와 시민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인간안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전략과 자원이 부족하다. 서

로 다른 이유이지만 정부와 민간의 인간안보 전략 및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결과 대립상태의 남북 관계를 전환시키기 못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인간안보 접근이 제약받고 있다. 그 이유를 “전략 공백”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분쟁 후 전략 공백

인간안보 시각에서 볼 때 분쟁 후 대응 전략이 인간안보 달성 방법과 거리가 있는 전략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안보 공백으로 불리는 전형적인 현상은 평화유지활동(PKO)이 출구 전략에 초점을 둔 나머지 대중의 안보 필요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안보 전략이 인도주의 및 개발 관련자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천안함·연평도 사건 대응의 경우는 평화유지활동마저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남한 정부가 전개한 일련의 대북 압박과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한반도 차원의 인간안보 실현의 필수적 전제조건인 한반도 평화 정착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선 사과를 모든 과제의 전제조건으로, 다른 모든 방안보다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평화회복, 인도주의, 화해 등과 같은 과제들은 동면하고, 남북 관계는 대립이 지속되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남한 정부가 취한 대응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안보 공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지켜본 한 시민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불신,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54) 정해구, 「레임덕 막기 위해 ‘안보정치’ 동원?」, 『주간경향』, 제907호, 2011년 1월 4일.

일련의 사태에서 군은 무공을 세워 훈장 타고 영웅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는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군은 정작 국가 방위망이 뚫린 사정은 알아내지 못하면서도 주범을 확정하는 데만 성공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국방 개념은 계층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보통 국민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명과 생업의 보장을 국방의 절대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일부 계층에서는 국방이라는 국가요건을 정권 창출 또는 개인 영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이다.⁵⁵⁾

둘째, 거버넌스 공백은 분쟁 이후 거버넌스와 민주화 지원 노력이 미흡하거나, 분쟁으로 분열된 공동체의 신뢰 형성과 화해 노력이 부족할 때를 말한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학계가 다함께 강조해온 거버넌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즉, 정부의 대응 방식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밟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남북 간 공존과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 사태가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나갔지만 연평도 주민들은 전시형 대책을 지속하면서 남북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연평도 사건 1주년에 맞춰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집에 들어가라고 하거나, 희망근로 노인들을 동원한 '주민 화합행사'를 추진한 웅진군에 연평도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⁵⁶⁾ 주민 대피소 개선 사업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전에 건의되었지만 묵살된 바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전략상 허점을 안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

55) 홍지득, 「70대 민초가 '천안함 전쟁장사꾼'들에게」,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27일.

56) 『연합뉴스』, 2011년 11월 24일.

의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실제로 안보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안보 의식이 부족해서 연평도 사태가 터진 게 아니다. 결국 남북 간에 평화적인 해법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고 말하는 연평도 주민들의 말은 거버넌스상의 틈이 적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⁵⁷⁾

셋째, 국제적 반응상의 공백으로 꼽히는 지적은 대응이 안보, 인도주의, 개발 등 각 분야로 분리되어 있다거나, 국가 능력 및 기구 형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안보 문제에 편중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사건의 성격상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서해상과 유엔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있었다. 두 사건 사이 북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린 점도 중국의 대북 지원이 안보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⁵⁸⁾과 개발, 인도주의 기구들의 무반응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한적 역할을 보여주었다.

넷째, 자원 공백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재건 및 개발 초기 단계에는 지원이 너무 많고 본격적 단계에 들어서면 지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제, 정치, 전략적 이익을 반영하여 자금이 특정 분야에 배정돼 인간안보상의 필요가 소홀히 다뤄지는 점도 꼽힌다.

두 사건 이후 남한이 군사력 증강, 피해지역 재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각각 투입한 비용은 극심한 불균형 상태이다. 군사력 증강에 투입된 천문학적 비용, 연평도 복구 및 서해5도 개발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거의 전무한 대북 지원이 그렇다. 측정하기 어려운 군사력 증강 비용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7) 송지혜(2011), pp. 14-15.

58)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PRST/2010/13, 9 July 201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에 배정된 10년간 9,100억 원 모두 초기 단계에 집중 발표되었고, 그 중 군사비가 압도적이다. 연평도 주민들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국회의원 등 많은 고위 인사들이 포격 직후 연평도를 방문해 조속한 대책을 약속하고 돌아갔지만 추후 실질적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⁵⁹⁾ 그런 가운데 피해 지역주민들의 인간안보 실현과 그 필수조건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자원 배분은 관심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4) 관련 행위자의 역할과 관계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긴장완화와 남북 대화를 위한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입장 발표가 있었다. GPPAC-NEA는 2010년 6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천안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제 행위자들의 협력,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남북한 정부와 유엔의 역할을 촉구하였지만,⁶⁰⁾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인간안보 증진에 있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다. 위 성명에서도 국가는 물론 전문가, 시민 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남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공통적인 이유는 둘 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고, 인간안보 전략 수립 및 능력 동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구체적 이유가 부분적으로 달라 보인다.

먼저, 천안함 생존 장병 치료 및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을 제

59) 한반도 평화포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 관련 연평도 면장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연평면사무소 회의실, 2011년 8월 4일.

60)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Cheonan Incident in Support of Korean Civil Society," 24 June, 2010.

외하고는 인간안보에 부합하는 정부의 조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북 제재 및 군사력 강화와 같이 국가안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였다. 국가안보 일변도의 대응은 북한 주민의 식량 및 건강안보를 위협하였고, 남한 사회 내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를 저해하였다. 또 남북한 정부가 엮어낸 상호대립은 남북 간 전체 주민의 인간안보, 특히 화해와 공존을 중시하는 남북 간 공동체 안보를 위협하였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일부 선진국가의 군(軍)은 국가안보만이 아니라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 재난구제, 인권보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군도 인간안보를 고려하는 작전 개념 및 군사훈련이 필요하다.⁶¹⁾ 그렇지만 본 연구사례에서 군은 군사력 증강 및 추가 군사훈련을 통한 긴장고조, 민간인 사찰 및 정보공개 거부 등 문민통제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임으로써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였다.

민간 역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인간안보 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천안함 사태에 있어 진실규명 노력과 희생 장병 가족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있었고, 연평도 사태에 있어서는 피난 주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있었다. 그런 활동은 피해 대중의 식량, 건강안보에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활동이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간 부문은 정부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고 인권 억압에 저항하는 데 집중하면서 인간안보 증진 전략을 수립·집행할 능력이 더욱 제한되었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은 대립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그것이 양측의 제한된 인간안보 증진 역량을 더욱 제약하였다. 민간은 정부와 반대로 인간안보에 친숙한 시각을 갖고

61) 유현석, 「군과 인간안보: 이론, 사례, 한국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5호(2011 겨울), pp. 232-239.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경험과 능력 면에서 전략 수립 및 자원동원이 힘들었다. 또 민간부문 내에서 두 사건의 대응 방향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북 제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은 물론 두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도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수렴된 대립 양상은 인간안보의 접근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침묵한 것도 정부와 민간의 인간안보 증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⁶²⁾ 또 인천시와 옹진군 등 분쟁발생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은 존재조건상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자구노력, 정부지원 요청 등을 전개하였지만,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한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국가 이익의 뒷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유엔에서 회자되어 온 인간안보 접근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엔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5. 평가와 결론

이상의 논의 결과를 본 분석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측면에서 간단히 평

62)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안건이 제출된 바 있지만 채택이 되지 못하였다.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증언. 신동호, 「현 집권세력은 인권에 관심이 없어요」, 『주간경향』, 제920호, 2011년 4월 12일.

가해보자. 먼저, 외재성을 생각해볼 때 국제기구로서 유엔 안보리와 지원기구, 그리고 이해당사국의 반응,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 책임자를 밝히지 못하고 군사적 갈등 중단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그 모호성과 참여국들의 상호 견제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여성 및 아동 영양 지원’ 프로젝트(기간: 2010.7.1~2012.6.30)는 2011년 12월 7일 현재 총 9,919,241만 달러 중 23.1%(2,295만 달러)가 모금되어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⁶³⁾ 여기에 천안함 사태 이후 미 함공모함이 참여한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그에 대한 중국의 해상훈련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한반도에서의 인간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사례에서 외재성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선순위와 관련한 평가이다. 천안함 침몰 직후 NLL 감시 강화, 연평도 주민 피난과 같은 조치는 적절했지만, 천안함 발생 직후 진상규명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북 압박조치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방식과 그 결과, 그리고 발표 시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북 응징과 정치적 이용의 의혹이 일어났다. 이는 천안함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케를 같이한다. 북한의 2차 연평도 포격은 남측 초소나 수협, 유류저장고, 옛 군사시설 등이 주공격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인근 민가도 피해를 입었다. 공격 대상이 됐던 우체국은 옛 헌병대 건물이고, 직접 포격을 당한 연평슈퍼

63)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Resource Situation, 7 Dec 2011, http://one.wfp.org/operations/current_operations/ResUpdates/200114.pdf (검색일: 2011년 12월 12일).

는 과거 보안대 건물이었다.⁶⁴⁾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는 포격 이전부터 연평도에서 건의한 대피소 개보수가 목살된 사실과 함께 정부의 조치가 인간안보 시각과 크게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는 서해5도 개발계획을 밝혀 주민 안전과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일차적 조건인 남북 간 긴장완화 노력에는 소극적이었다.⁶⁵⁾

셋째, 보호와 역량강화에 관한 평가이다.⁶⁶⁾ 보호의 측면에서 두 사태 이후 남한의 피해 주민들이 식량, 건강, 개인 안보 등에 대한 접근이 신속히 보장되고 연평도의 경우 10년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경제안보에 유용하다. 반면에 두 사태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억압과 시민사회 내 갈등은 개인, 정치, 공동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나아가 두 사태 이후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도 남북간 공동체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 간 상호 대응은 분쟁 이후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채 역량강화의 과제에 직면할 때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보호 조치 과정에서 나타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기획·실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여건, 정치적 신뢰, 그리고 남북 간 협력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분쟁 후 역량강화는 피해 지역사회의 능력 강화, 자원 운영 강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등이 요구되는데,⁶⁷⁾ 본 연구

64) 『오마이뉴스』, 2010년 11월 25일.

65) 물론 2011년 4월 남북 간 비밀접촉에서 정상회담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주장이 다르고 남한 정부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도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6월 1일; 『프레시안』, 2011년 6월 2일.

66)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두 기본 전략인 대중 보호와 대중의 역량강화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 Francois Fouinat,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Human Security,"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Vol. 4 No. 3 (2004), pp. 290-291.

67) Human Security Unit(2009), p. 51.

사례에서 이런 현상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나타난 남북 관계와 남한 사회 내 현상을 인간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분석,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인간안보론은 전통적인 주류 패러다임인 국가안보론과 다른 지향과 접근방법,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안보론은 비판이론이 아니라 실용이론이다. 그럼에도 본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인간안보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한 정부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의지해 상호 대응하였고, 그 결과 남북 관계는 대립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남한 내에서는 두 사건을 계기로 피해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간안보는 물론 일반 대중의 개인·정치 안보도 악화되었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정치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료접근의 문제로 북한 내 현상은 거의 다루지 못했지만 북한의 대남 정책과 담론을 생각할 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인간안보 억압이 심각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본 사례에 대한 '분쟁 후 인간안보' 분석 결과는 결코 양호하지 못하다.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대중의 생명과 복리, 그리고 인권에 미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 발생시 자국 정부 혹은 소속 집단을 무조건 지지하고 타방을 적대시하기를 강요하는 현실을 넘어, 국가의 주인인 대중의 입장에서 안보 문제를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문에서 분쟁 후 인간안보의 원칙과 접근방법, 그리고 실행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분석은 남북 관계를 기성 국가안보 패러다임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립과 불신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초래하였고,

그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다시 최악의 상태를 겪었다. 연구목적상 이 글은 실증주의 분석의 논법인 (남북 관계와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의 깊이에 주목하였다.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과 접근방법에 대한 발상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남북한 정권이나 상위 계층이 아니라 일반대중이었다. 그런데도 남북한 정권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중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남북 관계의 전개 과정과 미래를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대중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해 주고, 남북 관계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킬 동력과 내용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사례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은 늘 대립하는가? 그렇다면 인간안보에서 국가는 용도폐기되어야 하는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고 그 사이에 공통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국가와 비국가부문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 요컨대, 인간안보는 분쟁사례에 대한 하나의 분석틀로 그치지 않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간 공존을 통해 대중의 생명, 생존,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 사례에서도 인간안보는 군사적 충돌까지 간 남북 관계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남북 모든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남북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인간안보론이 남북 관계와 관련 현상을 새롭게 분석 평가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부각시킨 데 만족하고자 한다.

Human Security in the Post-Conflict Situation and Two Koreas' Relationship: A Case Study of Cheonan Ship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Suh, Bo-Hyuk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isting dominant ways of explanation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are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This study is a rewriting of the relationship raising aspects, which has been disregarded by the existing approaches, through the lens of human security. Two Koreas' relationship in the post-conflict situation is selected to bring the difference on the surfa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paradigm. The two govern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Cheonan sinking and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have counted with each other depending on national security paradigm, therefore they could not be free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All aspects of human security of the people concerned and individual, political security of all the people in South Korea were threatened in the aftermath of the two incidents. In this case study, it seems that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confront with each other. However, whether the both paradigms are always in conflict remains to be observed.

•Key words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two Korea's relations, Cheonan incident, incident on Yeonpyeong Island, Northern Limit Line (NLL)